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지역 기업 의견 조사

2022. 3.



부산상공회의소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및 배경

- 최근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보다 강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확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 온실가스 감축은 탄소중립과 ESG경영에 맞물려 향후 기업의 주요한 경영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아직까지 지역 기업들의 대응 수준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이번 정부의 목표 상향에 대한 지역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시점에서의 대응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관련 건의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본 조사를 시행함

2. 조사범위 및 대상

- 부산상공회의소 주요 제조기업 100개사

3. 조사방법

- 설계된 조사표를 통한 Google 온라인 리서치

4. 조사 내용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에 대한 기업 의견 전반
- 온실가스 감축 관련 준비 수준 및 대응 방안
- 애로사항 및 정책 요구 사항 등

1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주요 내용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준 26.3% → 40.0% 상향(18년 대비)
- 부문별 세부 감축 목표 중 산업 부문은 기준 6.4% → 14.5% 상향
- 연평균 감축률은 4.17%로 주요국보다 높은 도전적 목표 설정

1.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주요 내용(21.10.)

※ 2030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 감축 이행을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우리나라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최초 수립
- 2018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2021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어 NDC 최소 기준을 18년 대비 35% 이상 감축으로 법제화

○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 수준

-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 입법 취지와 국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기준 26.3%에서 40.0%로 상향 조정함
- 이를 연평균 감축률로 환산하면 4.17%/년이며 이는 주요국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도전적인 목표 설정
※ 주요국 연평균 감축률(%/년, 기준연도 → 2030년)
 - EU 1.98%/년, 미국 2.81%/년, 영국 2.81%/년, 일본 3.56%/년

○ 산업 부문은 기준 6.4% 감축에서 14.5%로 대폭 상향

- 에너지 수요가 많고 탄소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철강, 화학 업종이 주요 감축 대상인 가운데 전체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 절감이 기본적으로 전 산업에서 요구되고 있음
- 특히 에너지 효율 설비 전환, 자원 순환을 통한 폐원자재 활용률 제고, 발전 연료의 LNG ·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이 주요 내용으로 부각

○ 이번 목표 상향에 대해 산업계의 우려가 높은 상황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EU와 미국 등 주요국 대비 제조업 비중이 높고 탄소저감 기술 상용화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업과 경제 여건 보단 국가 위상과 명분을 앞세운 목표 설정이란 우려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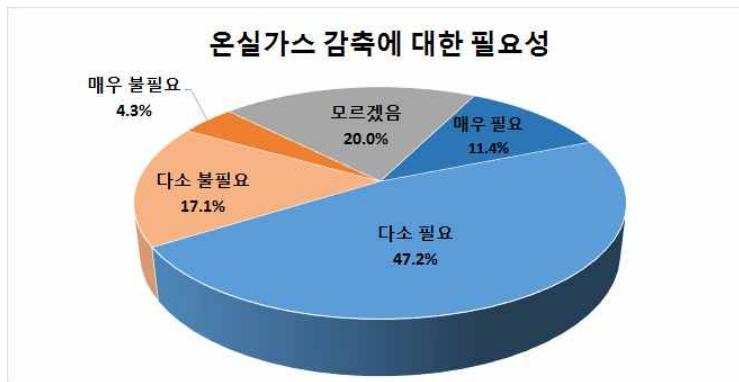
2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에 대한 기업 의견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필요성은 58.5%가 긍정적
- 반면 감축 목표에 대해선 75.7%가 과도한 수준으로 인식
- 정책 강화가 기업 경쟁력 악화와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 높음
- 국내 경제와 기업의 여건이 반영된 현실성 있는 목표 수립이 요구됨

□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감축 수준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필요성은 응답업체의 58.5%가 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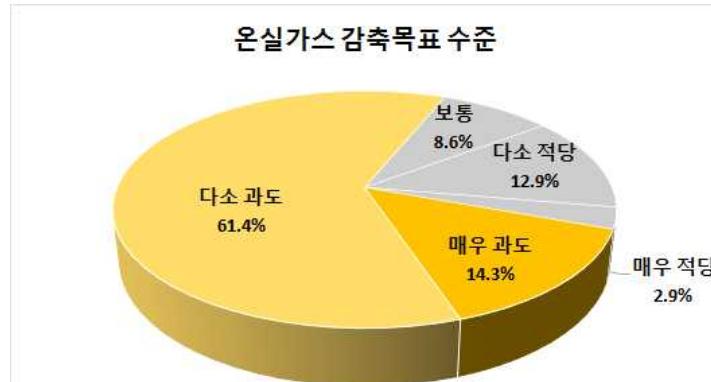
- 온실가스 감축에 긍정적 비중은 ‘매우 필요’ 11.4%, ‘다소 필요’ 47.2% 등 반수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부정적 응답은 ‘매우 불필요’ 4.3%, ‘다소 불필요’ 17.1%로 비교적 낮음



- 최근 환경 이슈와 ESG 경영이 대두된 만큼 지역 기업 역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목표 수준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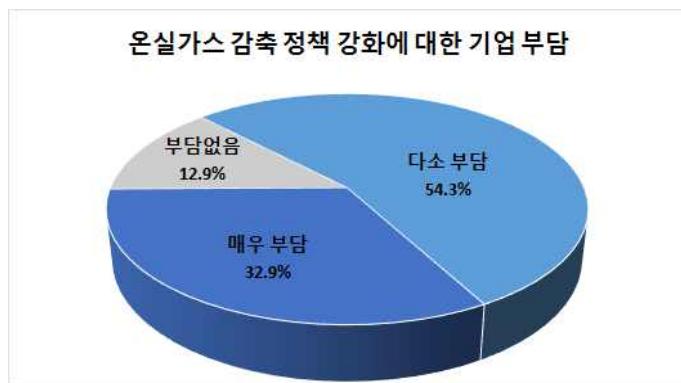
- 정책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향된 목표 수준에 대해 ‘매우 과도’ 14.3%, ‘다소 과도’ 61.4%로 부정적 의견이 75.7%로 높음



- 반면 이번 상향 수준을 적당하다고 보는 비중은 ‘매우 적당’ 2.9%, ‘다소 적당’ 12.9%로 낮게 나타나 정부의 목표 상향 수준이 기업의 수용 가능한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실제 응답 업체의 87.1%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 강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 ‘매우 부담’ 32.9%, ‘다소 부담’ 54.3%로 부담의 목소리가 높은 반면 정책 강화에 대해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12.9%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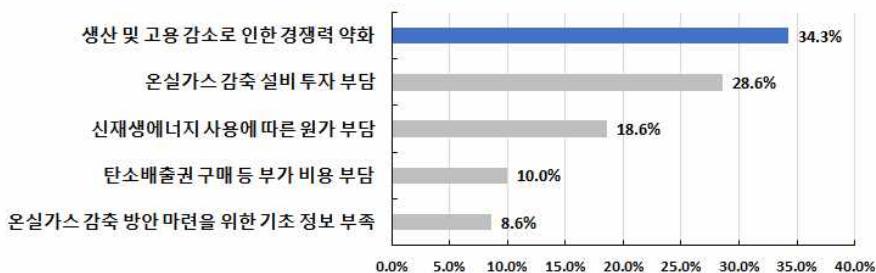


- 아직까지 기업의 대응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에 정책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온실가스 감축 정책 강화로 우려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생산 및 고용 감소로 인한 경쟁력 약화’ 34.3%

- 온실가스 감축 정책 강화가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은 가운데 특히 생산 감소와 고용 축소를 우려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 부담’ 28.6%, ‘값비싼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각종 원가 부담’ 18.6%, ‘탄소배출권 구매 등 부가 비용 부담’ 10.0%, ‘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정보 부족’ 8.6%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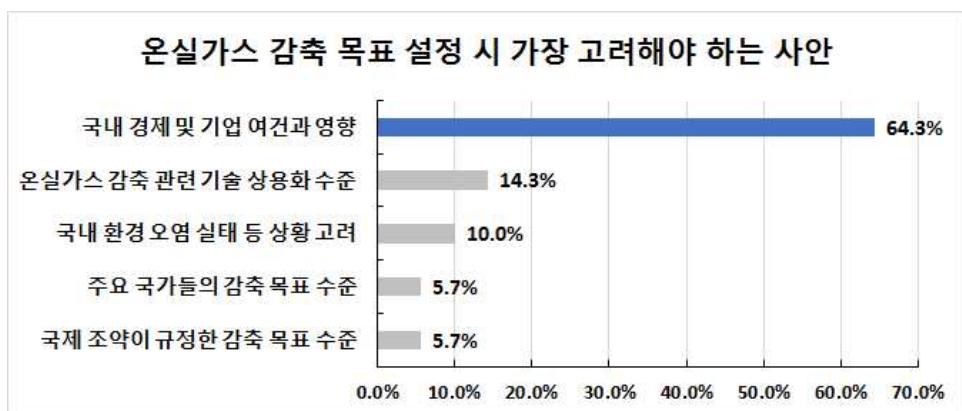
온실가스 감축 정책 강화로 우려되는 애로사항



- 한편 설비 투자에서부터 신재생 에너지 비용에 이르기까지 각종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확인돼 환경에 대한 정책 강화가 결국 기업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 역시 매우 높음

○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가장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국내 경제 및 기업의 여건과 영향’ 64.3%

- 이어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 상용화 수준’ 14.3%, ‘국내 환경오염 실태 등 상황 고려’ 10.0%, ‘주요 국가들의 감축 목표 수준’ 5.7%, ‘국제 조약이 규정한 감축 목표 수준’ 5.7% 등의 순



- 이번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경제 사정과 기업의 현실보다 과도하게 수립되었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지역기업들 역시 기업의 여건이 반영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음
- 코로나19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불확실한 전망 속에서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선 경제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설비 투자와 기술 도입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관련 기술 상용화 수준에 맞춰 목표 설정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음
- 반면 국제 조약이나 주요국의 목표 수준을 고려해 국가의 위상과 이미지에 치중한 정책 결정은 기업들이 인식하는 정책 수립의 결정 사항에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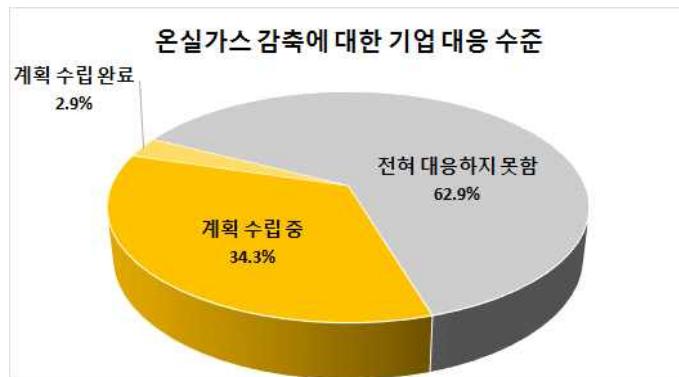
3 온실가스 감축 대응 현황 및 정책 요구 사항

- 기업 대응 수준 아직 낮지만 ‘계획 수립 중’ 인 비중 다수 확인
-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저탄소·고효율 설비 투자’ 41.4%
- 설비 투자 지원과 더불어 대-중소기업 간 협력, 법·제도·인프라 개선에 이르는 종합적인 기업 지원책 마련이 필요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지역 기업의 대응 수준

○ 기업의 대응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지만, 대응 노력은 확대 중

- 대응 계획이 수립된 기업은 2.9%에 불과한 반면 62.9% 반수 이상이 ‘전혀 대응 하지 못함’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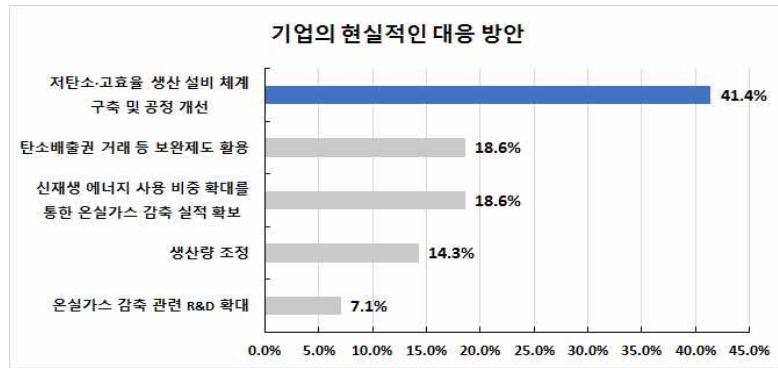


- 아직까지 기업이 체감할만한 직접적인 영향이 적고 기업 자체의 관심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정보 부족과 정책에 대한 낮은 이해도, 설비 투자를 비롯한 각종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지역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대응 수준은 ‘전혀 대응하지 못함’이 과반으로 낮은 수준
- 다만 대응 계획을 수립 중인 기업 비중도 34.3%로 나타나 기업의 선제적 준비를 지원할 정책 방안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업의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저탄소·고효율 생산 설비 체계 구축 및 공정 개선’ 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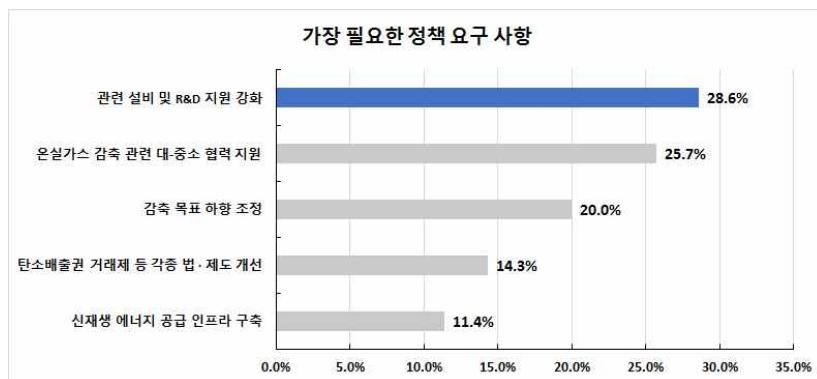
- 이어 ‘탄소배출권 거래 등 보완제도 활용’ 18.6%,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 확보’ 18.6%, ‘생산량 조정’ 14.3%, ‘온실가스 감축 관련 R&D 확대’ 7.1% 등의 순



- 기업의 온실가스를 감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설비를 확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코로나19 등 부정적 경영 여건으로 기업의 자체적인 투자 여력이 부족한 만큼 정책자금 지원 확대가 필요함
- 한편 탄소배출권, 전력수요관리제도 등 보완제도를 활용하거나 신재생 에너지 사용으로 감축 실적을 확보하겠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남

○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정책 요구사항은 ‘관련 설비 및 R&D 지원 강화’ 28.6%

- 설비 투자 지원의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관련 대-중소 협력 지원’ 25.7%, ‘감축 목표 하향 조정’ 20.0%,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각종 법·제도 개선’ 14.3%,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프라 구축’ 11.4% 등 다방면의 정책적 요구가 고루 나타나 기업 요구를 반영한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온실가스 감축은 최근 경영트렌드로 부상한 ESG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운데 대기업과의 협력관계에 있는 지역기업들 역시 ESG 경영과 온실가스 감축 요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므로 대-중소기업 협력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 필요

4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업의 목소리

① 당위성 이해하지만, 기업과 경제 여건을 고려한 목표 필요

“감축의 당위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을 본다면 도전적인 수치의 목표치보다 무리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함.”

“감축 관련 기술 수준이나 장비 등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 현실적인 수준의 목표 설정이 요구됨”

“온실가스 감축은 시대적 요구 사항이자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 당면하는 부담이 피부에 와 닿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홍보 정책이 필요하며 여기에 따른 실질적인 행정 및 기술적인 정책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글로벌 추세를 국내 실태와 잘 접목하여 현실적인 목표치를 수립하여야 함”

“글로벌 목표 준수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되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무리하게 너무 앞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음”

“우리나라만 너무 앞서 나갈 필요가 없음. 국제적 보조에 같이 발맞추어 나가야 함”

“주변 국가나 기타 국가보다 과도하게 상향된 목표 설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음”

“과도한 목표 설정은 그에 반한 부작용이 있음. 서서히 목표에 도달하는 것도 부작용 없이 목표달성을 하는 좋은 방법임”

② 온실가스 감축,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

“대체에너지가 없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 달성을 방안은 생산량 감소와 막대한 환경개선 투자로 이어져 기업경쟁력 감소와 고용 축소를 야기할 것”

“온실가스 감축은 상당 부분 기업의 원가 상승에 따른 경쟁력 약화 요인이고 지만 글로벌 트랜드에 맞춰 갈 수밖에 없음”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업의 생산성이 감소 될 수 있음”

[3] 온실가스 감축 관련 중소기업 지원 강화 필요

“온실가스 감축은 세계적 추세이니 그에 걸맞은 추진이 필요하나 기업들의 투자에 대해선 세제 혜택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사용 연료에 대해선 탄소배출권 총량제가 아니라 생산량과 연계한 배출량 관리가 필요하며 환경개선 투자에 필요한 자금은 장기융자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함”

“온실가스 감축 제품 개발 및 성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함”

“기업 현실에 맞는 감축 목표 설정과 중소기업 지원책 확대 필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관련 서비스 구축 자금 지원 필요”

“중소기업 보완책 절실”